

“헌재 위상 때문에 소장 반토막 임기 곤란”

盧대통령 ‘100분 토론’ 발언록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복핵 문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추천, 정계 개편 등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거 표현은 자제했으나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현안에 대한 시각을 차분히 제시했다.

◇포괄적 접근 방안=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통의 포괄적 접근 방안’과 관련, “이제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북한도 알고는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아직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 쪽에 이 방안을 제안한 시점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 못한다”면서도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기 이전으로, 송민순 안보실장이 저의 방미를 결정할 때부터 이와 같은 구상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전 제법 오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포괄적 접근 방안’에 9·19 성명에 한국이 부담으로 한 비용 이상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비교적 절충적 접근에 관한 문제이고, 내용에 관한 것은 6자회담 테이블에 서면 다시 출발할 것”이라며 “이번의 포괄적 접근은 그러한 실질적 내용에 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노 대통령은 이날 “여러 의견들이 영여있기 때문에 ‘원가 공개’에 대해 좀 신중하자’고 (예전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런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분양원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6월 9일 민노당 지도부 초청만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 원가공개 반대는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거 견해 표명 이유에 대해 “아주 인기가 좋은 곳,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곳에서 돈을 못 벌게 여겨하면 장사가 잘 안되는 데서는 정부가 물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답이 안 나와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했다”며 “전부 원가연동제로 묶어버리면 융통성있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정부가 계속 뒷돈을 대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민일에

개인사업자들이 그런 제도 하에서는 집을 못 짓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계개편론=노 대통령은 중도개혁세력

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어느 경우라도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가급적 답을 같이 하고, 정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서로 연합하고 타협할 수 있으면 답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은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새로 만드는 정당, 이합집산을 어떻게 하든 제발 그것은 좀 하지 말자, 정책

노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향”이라며 “그러니까 제가 임명할 때는 그 임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싶은 것이며, 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수행해야 될 시대정신이 있고 시대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작전통제권=노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북한이 어떤 핵 실험 상황이나, 아닌 상황이나,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과 작전통제권과는 별개 문제”라며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지상군·공군 분리 환수

6자회담 ‘포괄적 접근’ 北도 반대 안해 공공분야 대대적 주택공급 계획 추진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방영된 MBC ‘100분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분양원가 공개, 복핵 문제 등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녹화는 지난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있었다. /연합뉴스

승리에만 매몰돼 당 깨는 일 안했으면 한국 능력 있어 작통권 환수하려는 것

통합론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고 밝힌 뒤 “정치라는 것은 제가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도 있고, 또 좌우할 수 없더라도 제가 말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말을 또 피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며 “이 부분은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 중에서 말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을 가지고 정당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소장 임명=노 대통령은 전효숙 후보자의 6년 임기 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민이 제게 준 기회가기 때문에 그 기회에 따른 권한을 제가 행사했을 뿐이고, 그 사람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편파적으로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며 “소장을 임명하는데 반토막 임기로 해서 헌법재판소 위상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의견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은 의사결정의 문제로, 의사결정 문제는 한국이 다 가지며, 공군도 다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그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기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메커니즘 운용을 미 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한나라당의 방미외교에 대해 “의원의교리는 것은 국가외교를 돕는 방향으로 가자지 국가 외교를 관 개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의원의교리”며 “미국의 입장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핵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선거 후유증-명드는 지역사회

공무원 사회의 ‘꽃’은 승진이다. 또 이른바 ‘물줄은’ 보직은 공무원들에게 항상 선망의 대상이다.

공직사회 승진과 보직전환에 따른 비리와 구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 공무원 인사를 둘러싼 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인사를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상식 밖의 정실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매관매직·정실인사 4년마다 정례 흥역

- 1.극심한 편가르기
- 2.뒤집히는 정책들
- 3.인사는 복마전
- 4.판결에 떠는 단체장들

민선 자치이후 또 하나의 큰 병폐는 상식 밖의 ‘파행인사’다. 특히 단체장이 갈릴때 능력이나 적합성을 무시한 채 선거를 도왔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이들을 중용하는 사례가 황폐해 조직 전체의 틀을 흔들어 놓는다.

이는 모두 단체장이 쥐고 있는 막강한 인사권의 남용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다.

‘복마전’에 비유되는 자치단체 인사 부조리의 유형은 크게 ▲급품수수를 통한 매관매직 ▲단체장 독단에 의한 파행인사로 크게 구분된다.

민선 3기 광주지역 모 구청장의 부인이 승진 대가로 공무원들로부터 5천만여원을 받아 구속됐던 사건은 대표적인 인사비리로 꼽힌다. 인사철만 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사무관 승진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이상, 서기관은 수천만원이 들어간다는 풍문이 그치지 않는다.

선거 후 단체장이 교체되는 지자체는 대부분 이같은 흥역을 앓았다. 전임 단체장이 신임했든 간부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가나 승진기회를 얻기 어렵게 된다. 군청 핵심 과장으로 근무하다 반대편에 섰던 후보가 군수로 당선되면 오직 면장으로 발령나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인사위 시민단체 참여를

자치단체 인사부조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기초단체의 인사위원회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실·국·과장과 함께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도 구성돼 있다. 자치단체별 차이는 있지만 내부인사와 외부인사가 절반씩이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활동은 유명무실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부단체장이 중요 인사에 풀리는 단체장의 ‘관심’을 거스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립성을 강조해도 단체장이 염두에 둔 사람에 대한 우대를 거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직사회 현장의 목소리다.

따라서 현재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건전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시켜 객관성을 높여야 인사부조리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의 인사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문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승진 비용 최소 1천만원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이명석 교수와 행정부 감사관실 정경호 사무관이 지난해 말 광역·기초단체 4~7급 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따르면 조사 대상의 절반 정도가 승진을 위해 돈을 쓰려면 최소한 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자치단체의 인사관행에 대해 90.8%가 부정적으로 답변해 ‘깨끗하다’는 긍정답변(9.2%)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또 승진과 급품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51.0%가 ‘필요없다’고 답변했으나 나머지는 14.8%가 1천만~2천만원, 14.2%가 2천만~3천만원, 10.4%가 3천만~5천만원, 3.6%가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보일러를 사용하시는 주부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보일러를 사용하는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를 귀뚜라미보일러 A/S센터 (1588-9000)에서 미리 점검 받아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십시오.

귀뚜라미 보일러 A/S전문성을 자랑한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구입 및 A/S 문의는 1588-9000으로 해주십시오.

귀뚜라미 보일러가꾸러 번는방기

2007년 대학수시입학생을 위한 중국어 초·중·고 단계 완성 프로젝트

“합격으로 갈아타는 새로운 보약을 위한 기회!! 중국어 입문부터 155시간까지 5개월 집중반습!!”

합격보 - 기초사제출반형 + 550시간2개월반형

1월	입문반	중급반	고급반
2월	중급반	고급반	고급반
3월	고급반	고급반	고급반
4월	고급반	고급반	고급반
5월	고급반	고급반	고급반
6월	고급반	고급반	고급반

중국어 전문학교 리틀자이나 中国語学院

233-9582